

# 2012년 방송 3사 동시파업 사태와 시사점

정청천 · 장흥근\*

## I. 머리말

MBC·KBS·YTN 등 방송 3사의 노조가 2012년 상반기에 동시파업을 벌였다. 방송 3사의 동시파업은 방송사상 초유의 일로 MBC가 170일(1월 30일~7월 17일), KBS가 94일(3월 6일~6월 7일), YTN이 43일(10차례 시한부 파업)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지상파 방송은 사회적 공기(公器)로 인식되고 있는 언론 가운데서도 특히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매체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 이래 정치사회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면서 방송사 노사관계는 다소의 굴곡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타 공공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송사 노사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2년 지상파 방송 3사 동시파업이라고 하는 전례없는 양상을 보였다.

방송 3사의 노조들은 이번 동시파업을 통해 공정방송 회복과 더불어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사장 퇴진 등을 요구했다. 개별 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에서 주로 촉발되는 일반적인 노사분규와 성격이 달랐던 것이다. 2000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던 방송 산업 분야에서 파업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다수 사업장 동시파업의 형태로 유례없이 장기간에 걸쳐 전개된 맥락에 대해서는 다각도에 걸쳐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 글은 2012년 방송 3사 동시파업 사태의 원인과 전개과정 및 함의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방송 3사를 중심으로 방송사 노사관계의 현황과 구조적 특징을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2012년 방송 3사 동시파업의 원인과 전개과정, 파업 이후의 상황 및 앞으로의 과제 등을 짚어보았다.

\* 정청천=비전노동센터 책임연구원(doolmail@daum.net), 장흥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changhg@kli.re.kr).

## II. 방송사 노사관계 현황과 특징

### 1. 방송 3사 노조 현황

MBC·KBS·YTN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언론노조는 2011년 기준으로 100개 사업장에 1만 2,383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서울MBC지부와 18개 지역계열사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MBC는 1,100여 명이 조합원이고, 지역계열사 소속 조합원은 900여 명이다. KBS에는 기업별노조인 KBS노조와 산별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가 만들어져 있다. KBS노조는 기술직 중심(2012년 기준 조합원 2,800여 명)으로, 언론노조 KBS본부는 기자·PD 중심(2012년 기준 조합원 1,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조합원이 400여 명이다.

우리나라 방송노조는 설립 이후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방송의 민주화를 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KBS·MBC 등 방송노조는 ‘방송노동자의 권리’, ‘공정방송 구현’, ‘민주시민사회 건설’ 등과 같은 운영 목표를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조합원의 의식도 이와 유사하다. KBS노조가 노조 출범 직후인 1988년 7월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공영방송의 확립(39.5%), 근로조건 개선(35.4%), 합리적 인사제도의 실현(17.8%) 등이 노조의 우선과제로 꼽혔다.

물론 방송사노조의 설립 초기와는 다소 다른 의식 변화도 감지된다. 2004년 KBS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노조의 우선과제 2개를 선택하는 설문조사에서는 복지·근로조건 개선(30%), 공정방송·공영성의 확립(21%), 임금인상(18%), 합리적 인사제도 및 직제(14%), 조합원 고용안정(12%) 순으로 나타났다.<sup>1)</sup>

이러한 변화는 노조가 창립되던 시기에는 불공정 방송 또는 방송 민주화가 노조에게 가장 큰 현안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복지·근로조건·임금 등 노동자의 1차적인 권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소유구조와 경영진 선임 절차

KBS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다. MBC는 1988년 KBS가 처분한 MBC 주식 70%를 인수한 공익재단 방송문화진흥회가 1대주주인 주식회사이다. 지역MBC는 서울MBC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다.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은 여러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분

1) 김용중(2004), 「공영방송노동조합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1〉 YTN 주요 주주 현황(2012년 6월 말 기준)

주주	주식 수	지분율(%)
한전KDN	9,000,000	21.4
KT&G	8,380,000	19.9
미래에셋생명	6,290,000	15.0
한국마사회	4,000,000	9.5
우리은행	3,110,000	7.4
우리사주조합	76,041	0.2

자료: YTN 반기보고서(2012. 7).

산소유하고 있다.

방송 3사의 경영진 선임은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는다. 국회 추천 3인 중 1인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권한을 갖는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가 권한을 나눠 갖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실제 권한은 정부·여당에 집중되는 구조이다.

현행 방송법상 KBS 사장 선임은 KBS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KBS 이사회는 정부·여당 쪽 7명, 야당 쪽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MBC의 1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이사들이 MBC 사장 후보를 결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1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가 결정한 사장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선임되는 구조다. 또한 공기업이 지분의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YTN은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이나 실제로는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

〈표 2〉 방송통신위·방송 3사 임원 선임 방식·절차

		선임 방식	법령 및 규정
방통위	위원장	대통령 지명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
	위원	5인 중 2인 대통령 지명, 국회 추천 3인 중 1인은 대통령 소속 정당	
KBS	이사	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	방송법 46조, 50조
	사장	이사회 제청, 대통령 임명	
MBC	이사	방통위 임명	방송문화진흥회법 6조
	사장	이사회 사장후보 결정, 주총 의결로 선임	
YTN	이사	주주총회 이사 선임	YTN 정관
	사장(대표이사)	이사회	

### 3. 공정방송협의제도와 노사관행

방송사는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공정방송에 대한 노사협의기구가 존재한다. 방송사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함께 노사간 자율적 기구인 공정방송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내부구성원의 제작과정 참여가 다른 기업에 비해 폭넓게 보장되어 있다. 현행 방송법에 의해 방송사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토록 법적으로 강제되었으며 KBS가 2001년 1월에, MBC가 같은 해 9월에 각각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했다.

KBS의 경우 편성규약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노사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에도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KBS 단체협약의 공정방송위원회 조항에는 기구 설치와 회의, 최소한의 장치 등 구체적 실현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MBC는 단체협약과 서울본부 보충협약에서 제작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단체협약의 공정방송협의회가 공정방송과 제작과정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주요 기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MBC에서는 편성규약이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표 3〉 KBS·MBC·YTN 공정방송 관련 규정

	KBS	MBC	YTN
주요 장치	본부장 신임 평가제(단체협약):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 불신 임 시 해임 건의 : 재적조합원 2분의 1 이상 불 신임 시 인사조치 건의	본부장 평가(단체협약): 과반수 이상 참여, 참여조합원 3 분의 2 이상 문제 있다는 판단 시 사장에게 결과 전달	정기회의 2회, 임시회의 3 회 미개최 시 보도국장 신 임투표(공정방송협약) → 사장은 결과 수용
구성	사측 부사장과 노측 부위원장 (단체협약)	회사 대표와 노조 대표(공정방 송협의회 운영규정)	사측 보도국장과 노측 공 정방송추진위 간사(공정방 송협약)
책임 및 문책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시정요 구나 재발방지 촉구, 특별한 사 유 없는 한 존중(편성규약)	공정방송협의회 과반수 찬성 인 사위원회 징계심의 요구 보직발령 3개월 경과 이후 문책 대상자 보직변경 요구(공정방송 협의회 운영규정)	공방위가 징계 및 보직 변 경·박탈 요구하면 인사위 와 사장은 존중 가부동수로 부결된 안건이 6개월 내에 다시 회부되면 가부동수라도 가결로 인정
편집관련 의견개진	보도위원회 운영세칙: 평기자 대 표 편집회의 참석 - 기자협회장 과 그가 정하는 1인 등 2명까지 참석, 편집회의 이외의 뉴스 편 집과정에 실무자들 공식 의견 제기		상근직인 공정방송추진위 간사가 편집회의 참석
효력	편성규약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은 단 체협약, 편성규약은 사규와 같 은 효력	공정방송협약은 사규와 같 은 효력

YTN은 공정방송협약에 따라 노조의 제작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협약에는 회사 측의 무성의로 공정방송 정례회의가 2회 이상 열리지 않거나, 절차에 따라 요구된 임시회의가 3회 이상 열리지 않을 경우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 보도국장과 사장은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Ⅲ. 방송 3사 동시파업

#### 1. 파업의 원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공영방송과 공적 소유구조 성격을 지닌 방송사의 경영진 선임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지속되었다. 방송사 경영진 선임 이후에는 방송사 내부에서 이들 경영진이 추진한 인사와 프로그램 개편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빚어졌다. 방송을 포함한 언론 전반에서 대규모 해고·징계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각 사별로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침해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KBS의 경우 기자와 PD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60.9%가 회사 간부로부터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반하는 제작 자율성 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sup> 언론노조 KBS본부가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취재기와 프로듀서 1,3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작 자율성·공정성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75명 가운데 411명이 자율성을 침해당했다고 답했다.

MBC도 KBS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김재철 사장 취임 1주년을 맞아 2011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원 93.2%가 사장 취임 이후 제작 실무상의 자율성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했다.<sup>3)</sup> 응답 조합원들은 김재철 사장

〈표 4〉 제작 자율성 침해 형태

인사	징계(파면, 해고, 정직 등), 발령(지역, 비제작 부서, 부서 이동 등)
조직개편	본부 이동, 실국 이동
편성	프로그램 명칭 변경, 프로그램 폐지, 편성시간 변경, 편성 누락, 개편
보도	아이템 누락, 불방, 기사 수정, 불합리한 취재 지시
제작	불방, MC교체, 외부 출연진 섭외 및 배제

자료: 박영선(2011), 『지상파방송 제작 자율성 개선 방안』.

2)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노보 29호(2011년 1월 12일), 1면.

3)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임단협 파기 도발! 투쟁속보 6호’(2011년 1월 24일), 1면.

취임 이후 뉴스와 시사 보도프로그램의 경우 88.1%가 불공정해졌다고 평가했고, 프로그램 폐지 및 신설 등 개편에 대해서는 87.5%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노사대화채널 단절도 파업의 원인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MBC의 공정방송협의회다. MBC에서는 김재철 사장이 부임한 첫 해인 2010년에는 형식적으로라도 협의회가 열렸다. 다만 김 사장이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장이 대신 참석했다. 사장 참석이라는 관행이 지켜져 오던 공정방송협회의 기형적 운영이었다고 한다. 형식적으로나마 열리던 협의회는 2011년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정례 협의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사안에 따른 협의회 경우 노조가 15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김 사장은 10차례 거부했다. 성사된 5번의 협의회에도 김 사장이 참석한 것은 한 차례뿐이었다. 또한 2011년 1월 김재철 사장은 노사 단체협상 무산과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노사는 2011년 10월에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YTN에서도 노사간 대화채널이 단절되면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창구가 줄었다. 구분홍 사장의 뒤를 이은 배석규 사장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공정방송위원회를 거부했다. 노조가 공방위 회의 개최 응낙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사측은 공방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2012년 초 방송사 동시파업은 이처럼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발생했다.

## 2. 파업의 전개과정

방송 3사 동시파업은 MBC기자회의 보도본부장 사퇴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 MBC기자회는 2012년 1월 5일 긴급총회를 열고 MBC 뉴스의 부실보도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죄하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의 사퇴 요구를 결의했다. 이에 회사 측은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의 불신임 투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1월 10일 MBC기자회장과 영상기자회장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MBC기자회는 1월 25일부터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MBC기자회의 제작거부는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기자회견의 제작거부에 이어 1월 30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MBC기자회의 제작거부와 MBC노조의 파업은 MBC·KBS·YTN의 동시파업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3사 노조는 2월 7일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정방송 복원 △김인규 KBS 사장·김재철 MBC 사장·배석규 YTN 사장 퇴출 △해고된 언론노동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KBS와 YTN의 단체행동은 각 사별 상황에 따라 진행되었다. KBS는 3월 2일 기자회견의 제작거부가 선행되었고, 3월 6일부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2008년 8월 이후 크고 작은 노사갈등을 겪어 오던 YTN에서는 그동안 쌓인 갈등이 2012년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이어졌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임단협에서 해고자 6명

복직과 배석규 사장의 연임 반대, 공정방송 복원을 요구했다. YTN지부는 임단협이 결렬된 후 단체행동 수순을 밟았다. YTN지부는 10차례의 시한부 파업을 진행했다.

유사한 요구조건을 내건 방송 3사 동시파업은 각 사별 상황에 따라 마무리되었다. 7월 1일까지 지속된 YTN지부의 10차례 파업의 시한부 파업은 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의 파업에 대한 연대파업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KBS 노사는 6월 6일 노사 동수로 대통령선거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하고, 탐사보도팀의 부활과 이병순 사장 이후 보복인사에 대한 원상복귀 등에 합의했다. 노사합의의 핵심은 공정방송위원회 설치였다.

가장 첨예한 대립을 빚어 온 MBC는 노조의 파업이 170일을 기록한 끝에 7월 18일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주목할 부분은 MBC의 경우 문서화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파업을 중단했다는 점이다.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중단 근거가 된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19대 국회 개원 합의문과 방송통신위원회 이사들과의 구두약속이다.

여야는 6월 29일 합의한 개원합의문에 MBC 파업 장기화 사태와 관련한 해법이 독립된 항목으로 명시되었다. 합의문은 “여야는 8월 초 구성될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 판단 및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 처리하도록 협조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언론 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산업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제작차질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방송산업에서 차지하는 외주제작 비율의 증가 때문이다. MBC의 경우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2005년 36.4%에서 2011년에는 47.6%로 증가했다.

방송산업의 외주화로 인해 방송파업이 양적인 제작 차질에 미치는 영향은 뉴스와 같은 보도부문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이다. MBC의 경우 노조의 170일 파업기간 동안 일부 교양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송차질을 빚지 않았다. 파업기간 동안 여론의 가장 큰 관심사는 MBC가 자체 제작하던 <무한도전>의 방영 여부였다는 사실은 방송파업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방송파업의 제작차질은 양적인 면이 아니라 시청률과 같은 질적인 부분에서 찾은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MBC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체인 2011년에 비해 파업이 벌어진 2012년에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KBS와 SBS의 메인뉴스가 전반적으로 소폭의 시청률 상승이 있는 데 반해 MBC 메인뉴스는 시청률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KBS-MBC-SBS로 이어지던 기존 메인뉴스 시청률 순위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메인뉴스 시청률에서 MBC가 SBS에 뒤쳐진 것은 이례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표 5〉 2011·2012년 지상파 3사 메인뉴스 시청률 비교

(단위 : %)

	2011		2012	
	주중	주말	주중	주말
MBC 뉴스데스크	11.2	11.1	6.8	5.2
KBS 9시 뉴스	19.0	15.2	20.2	14.2
SBS 8시 뉴스	11.1	9.9	12.4	10.0

자료 : AGB닐슨미디어리서치, 수도권 가구 시청률.

### 3. 파업의 중단과 이후의 갈등

#### 가. 보복인사 논란

MBC가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복귀 전날인 7월 17일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파업 참가자에 대한 보복인사 논란이 일었다. 48명의 조합원이 본인 동의 없이 원래 근무하던 부문 밖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회사 측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언론노조 MBC본부의 업무 복귀 이후 살아남은 조합원은 <무한도전> K PD뿐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sup>4)</sup>

KBS는 7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을 해임하는 등 노조집행부에 대해 중징계를 단행했다. 이들은 재심 결과 정직 7명, 감봉 5명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또한 MBC에서는 ‘교육발령’이 노사갈등 요인이 되었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고 있던 6월 1일과 6월 11일에 69명의 조합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 회사 측은 대기 만료기간인 3개월 기한이 다가오자 8월 17일에 이들에게 재차 3개월간의 ‘교육발령’을 내렸다. 9월에는 교육대상자가 추가되어 교육발령자는 60명이 되었다.

#### 나. 경영진 선임 갈등 재연

방송파업 이후에도 방송사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었다. 2012년 8월에 새로 선임된 MBC와 KBS의 이사회 구성 역시 다수의 정부·여당 추천인사(방문진 6대 3, KBS 7대 4) 위주로 짜여졌다. 두 방송사의 이사회 구성 뒤에 실시된 사장 해임안 표결과 신입 사장 선정은 노조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방문진 이사회는 11월 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야권’ 이사들이 발의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된 것은 2010년 7월과 2012년 3월 이후 세 번째다.<sup>5)</sup>

4) 미디어오늘 2012년 추석특별판.



KBS는 김인규 전 사장의 후임 사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이 거셌다. KBS 이사회는 11월 9일 노조의 반발에도 이사회를 강행해 길환영 사장을 선임했다. KBS의 두 노조는 길 사장을 부적격 인물로 규정하고 출근저지투쟁에 나섰고, 길 사장은 11월 23일 오전 김인규 사장의 퇴임식이 끝난 뒤 취임했다.

#### 다. 해고와 징계

방송 3사의 파업 과정과 업무복귀 이후에는 대규모의 해고와 징계가 이루어졌다. 언론 노조에 따르면 방송 3사 동시파업을 거치면서 2008년부터 누적된 방송 3사의 징계자는 407명에 달한다. MBC는 8명을 해고하는 등 총 223명을 징계했고, KBS는 133명을 징계했다. YTN은 해고 6명 등 51명을 징계했다. 당사자와 노조 측에서는 해고와 징계의 부당함과 과잉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sup>6)</sup>

〈표 6〉 2008년 이후 방송 3사 해고·징계자 현황

(단위: 명)

징계 종류	MBC	KBS	YTN
해고	8		6
정직	79	15	26
출근정지	1		
감봉/감급	43	15	
근신	30		
견책		3	1
경고	1	100	17
주의각서	7		
대기발령	54		1
명령휴직	3		
전 체	223	133	51

자료: 언론노조, 2012.12 기준.

- 5) 김재철 MBC 사장의 해임안은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3년 3월2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김 사장이 계열사와 자회사의 임원 인사 내정 사실을 방문진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한 부분이 직접적인 해임의 사유가 됐다.
- 6) 회사측이 내세운 해고와 징계사유는 불법·정치파업 가담과 회사질서 문란, 회사 명예 실추, 품위 유지 위반 등이었다.

## IV. 동시파업의 성격과 장기화 요인

### 1. 파업의 성격

방송사상 초유의 방송 3사 동시파업은 유사한 공적 소유구조를 지닌 KBS·MBC·YTN 등 방송 3사의 노조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었다. 이들 방송사는 모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다.

방송 3사 노조는 △공정방송 복원 △김인규 KBS 사장·김재철 MBC 사장·배석규 YTN 사장 퇴출 △해고된 언론노동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언론노조와 파업노조들은 파업의 과제를 세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경영진을 퇴출하고 해고·징계 언론인을 원상복구하며, 둘째, 언론장악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해 언론장악의 진상을 규명하며, 셋째, 공영언론사의 이사·사장 선임구조 개선 등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노조들이 단체협약상의 공정방송 위반을 파업의 이유로 들었으나 절차상으로는 위법성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방송 3사 노조파업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언론노조 MBC본부의 경우 기자회견의 제작거부에 밀려 노조가 파업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조 자체의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돌입과 KBS기자회의 제작거부 사태에 직면한 언론노조 KBS본부도 MBC본부와 동일한 경로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다.

### 2. 장기화 요인

#### 가. 내부 결속력

2012년 방송 3사 파업의 정점에 있었던 언론노조 MBC본부의 경우 파업 돌입 이전 상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010년 4월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39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물을 얻지는 못했다. 2012년 다시 파업에 나선 MBC본부가 단기간에 후퇴할 수 없었던 이유의 하나였다.

조합원의 요구가 거셌다는 점도 파업 장기화의 요인이다. 파업에 앞서 언론노조 MBC본부가 1월18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조합원의 93.5%가 김재철 사장 잔류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일선 기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MBC본부 파업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던 기자들의 제작거부는 파업동력을 높이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도 파업참가 인원이 늘었다는 점도 파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 첫 날인 1월 30일에는 57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고 2주 후에는 640여 명으로 늘었다. 이후에도 파업참가 조합원은 점차 늘어났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파업참가 조합원은 평균 770여 명이 꾸준하게 유지됐고, 지방 MBC 조합원까지 포함하면 1,3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기간에 30명의 보직간부가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동참한 점도 눈에 띈다. 보도국 논설위원과 해외 특파원도 사장 퇴진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정년이 2~3년밖에 남지 않은 국장급 고위 직원 35명이 언론노조 MBC본부에 재가입해 파업에 동참하기도 했다.

#### 나. 우호적 여론

방송 3사 노조의 동시파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내부 조합원 결속과 함께 여론전에서 노조가 앞섰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파업에 앞서 언론노조 MBC본부가 1월 11~12일 언론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김재철 사장 체제 이후 MBC의 공정성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63%에 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파업 시작과 함께 파업참가 조합원들이 만든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진짜 PD수첩>을 통해 여론전을 전개했다. 방송 대신 인터넷을 타고 전달된 <제대로 뉴스데스크>는 총 15회 제작돼 2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시청했다. 또한 언론노조 MBC본부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에 주력해 ‘으랏차차 MBC’, ‘방송 낙하산 퇴임 축하쇼’,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등 3차례의 대형 콘서트를 기획했고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파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기존의 KBS 뉴스가 다루지 못한 뉴스를 담은 <Reset KBS 뉴스9>를 제작했다. 3월 30일 <Reset KBS 뉴스9>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청와대 하명사건 처리부와 사찰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하였다.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방송 3사 노조에 대한 지원도 활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 말미에 1개월 동안 진행된 김재철 사장 퇴진과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에는 70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한다.

## V. 맺음말

2008년 이후 방송산업 노사관계의 균열은 기존 제도와 관행을 지키려는 노조와 새로이

경영권을 확립하려는 경영진의 마찰로 요약할 수 있지만, 2012년 방송 3사 노조의 동시파업은 공정방송 구현과 사장 퇴진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정치파업으로서의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 방송사상 최장기간 지속된 동시파업은 내부 구성원들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여론의 뒷받침 속에 장기간에 걸쳐 이어졌지만,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2012년 방송 3사 동시파업은 노사관계 차원에서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방송과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숙제를 던져주었다.

2012년 방송 3사 동시파업은, 이전의 방입형에서 적극적 개입형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번 파업이 개별 방송사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SBS를 제외한 KBS·MBC·YTN 등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 3사에서 유사한 사유와 패턴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절차적 형식적 합리성에 집착한 밀어붙이기 식의 인사가 이번 방송 3사 파업을 야기한 일차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은 향후 정부와 방송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한편 이 시기가 이례적으로 2012년 총선과 대통령선거라고 하는 큰 정치적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기간 중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방송 3사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태의 정치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게 하여 파업의 장기화로 이어졌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사회갈등 해결 역량의 한계만 드러냈을 뿐이다. 파업 종료 이후에도 방송 공정성 문제나 파업의 후유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방송사상 초유의 방송 3사 동시파업은 공영방송과 준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작금의 방송사 노사관계 파행과 2012년의 동시파업 사태는 언론의 자유, 더 좁게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법·제도적인 장치들이 정치권력의 의지와 거버넌스 운영에 따라 형해화될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공재로서 공영 및 준공영 방송사들이 언론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담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재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다.

향후 방송 노사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장기화된 방송사 노사갈등이 치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파업 사태의 구조적인 원인과 그에 대한 처방에 대해 해당 방송 3사의 노사 당사자뿐 아니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와중에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에 대한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노조와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지혜로운 해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라는 의미를 넘어 새로 출범한 정부의 언론정책, 나아가 정치와 언론의 관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KLL**